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군민이 주인입니다

2020년 강진읍 종합감사 결과



강진군
(기획홍보실)

2020년 강진읍 종합감사 결과

2020년 강진군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강진읍 종합감사 결과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및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I 감사 근거 및 개요

1 감사근거

-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강진군 자체감사 규칙」 제4조
- 「2020년도 강진군 자체 감사계획」(2019.12.12. / 기획홍보실-17466)

2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0. 12. 15.(화) ~ 12. 17.(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8. 11. 1. ~ 2020. 11. 30.
- 감 사 반 : 1개반 6명(총괄 : 감사팀장)
-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3 감사 중점사항

-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여부
- 사회복지, 시설공사 등 주민생활 밀접 업무
- 예산, 회계분야(계약, 물품관리) 적정 처리 여부
- 주민등록, 인감분야 등 민원행정 업무처리 적정 여부
- 보조금 집행 적정성 등

Ⅱ 감사 결과

① 감사 총평

- 2020년 강진읍 종합감사는 예산집행 및 회계, 주민등록·인감, 보안, 민원사무처리, 농지, 사회복지, 주민숙원사업 등 읍 행정업무 처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으며,
- 주민생활과 밀접한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대민행정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고 수입, 지출, 재정관리 부분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음.
- 그러나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업무에 대한 잘못된 행정관행의 답습 및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사무편람 등의 미숙지로 인한 업무처리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하여 주의 14건, 시정 10건 등 총 24건을 처분함.
- 강진읍은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 등 위반사항의 점검을 위해 직원의 업무연찬 및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강진읍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대주민 신뢰성 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처분 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원)

처분 건수	처분 요구 사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주의	시정	개선	계	회수	추징	부과	
24	14	10	-	6 (764,190)	4 (549,190)	1 (200,000)	1 (15,000)	-

3 처분 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원)

일련 번호	분야	건명	처분요구		비고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계		총 24건(시정 10, 주의 14)		764,190원	
1	공통행정	비밀문서 관리 소홀	시정		
2	〃	수입증지 수수료 납입 지연	주의		
3	〃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관리 소홀	시정	3,190원	회수
4	〃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	주의		
5	〃	기간제근로자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6	회계행정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및 정산 소홀	주의		
7	〃	공사계약에 따른 정부수입인지 징구업무 소홀	시정	200,000원	추징
8	〃	국내여비(관외) 집행 부적정	주의		
9	〃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 소홀	시정	231,000원	회수
10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시정		
11	건설행정	설계변경 추진 부적정	시정	106,000원	회수
12	〃	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주의		
13	〃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미이행	주의		
14	〃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	시정	209,000원	회수
15	〃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관리 소홀	시정		
16	복지행정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모니터링 관리 소홀	주의		
17	〃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주의		
18	〃	기초수급자 장애정도 진단비 및 검사비 신청안내 소홀	주의		
19	농업행정	보조지원 농기계 사후관리 소홀	주의		
20	〃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살포 지도 소홀	시정		
21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기본자료 작성 소홀	주의		
22	〃	소규모 다목적 텃밭 소득지원사업 관리·감독 소홀	주의		
23	기타행정	취학아동 명부 작성 및 관리 소홀	주의		
24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 소홀	시정	15,000원	부과

Ⅲ 지적사항 요약

① 비밀문서 관리 소홀

- 강진군 보안업무규정 시행지침 규정 제2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행안부 훈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예고문에 따라 비밀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소멸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연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음.

▶ 예고문이 지난 III급 비밀문서 4건을 특별한 이유없이 파기하지 않았고, 파기한 III급 비밀사본 16건에 대해서 비밀열람기록전에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연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보관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은 2015~2017년도 비밀열람기록전 11건을 임의로 파기하였음.

② 수입증지 수수료 납입 지연

-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 제20조(계기사용 및 무인발급기 사용수입금의 정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는 그다음 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8. 11. 1. ~ 2020. 12. 현재까지 75건, 10,896천원을 다음날 바로 납입하지 않고, 최소 1일부터 최장 26일까지 지연하여 납입한 사실이 있음

③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시에는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한 다음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 세출예산진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보관·관리 규정을 보면 구매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카드 사용내역을 전·후임 공무원은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게 되어 있음.
- 신용카드 사용절차에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등)는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사일 현재까지 신규로 발급받은 구매카드 2개를 발급 대장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구매카드 담당공무원이 교체되어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고, 구매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해서 전·후임 공무원 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포인트 금액도 입금하지 않는 등 구매카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④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음.

▶ 휴일 및 비상근무를 수행하면서 지문 인식 내역이 없고, 근무상황부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휴무를 사용하였음.

⑤ 기간제근로자 업무처리 부적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국민연금법」 제6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사역함에 사회보험 가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예초기 등 위험성이 있는 장비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단시간 근로자라도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데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⑥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및 정산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행사실비보상금(301-09)은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여하는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이나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교통비, 급량비 등)를 민간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참석하는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단체의 총무의 계좌로 일괄 입금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후 점상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세출예산 집행 관련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하였음.

⑦ 공사계약에 따른 정부수입인지 징구업무 소홀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전자수입인지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10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자수입인지를 미징구 한 사실이 있음.

⑧ 국내여비(관외)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여비(202목) 3-1.국내여비(202-01)에 따르면 회계담당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출장일시 및 출장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복명서 등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지 않고, 출장지에서 촬영한 사진 2매로 이를 갈음하는 등 국내여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9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로 소득세 등 원천징수 소홀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일정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을 규정

- ▶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등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0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업무추진비(203목), ‘각 업무추진비 공통’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 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 업무추진비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고, 강진사랑상품권과 특산품을 구입하고도 대상자 및 수량 등이 기재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하였음.

11 설계변경 추진 부적정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 제19조3에 의거 설계변경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해야 함.

- ▶ 공사 변경을 추진하면서 낙찰률(95%)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준공 후 계약금액 전액을 지출하여 106,000원을 과다집행 한 사실이 있음.

12 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

- ▶ 2019. 01. 29. ~ 2020. 06. 21.까지 준공된 공사 62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한 21건에 대한 최종 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3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미이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함.

- ▶ 공사에 대하여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조세포탈서약서)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서약서를 누락한 채 계약을 체결

14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준공시 환경관리비 정산서 및 사용내역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209,000원 상당을 과다 지급

15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관리 소홀

-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발생 빈도와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평상시 철저한 사전대비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대처가 필요
- 재해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등은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불량 자재 폐기, 부족 자재 확보를 위한 사용 가능 여부 및 보유량 확인, 자재부패 예방 관리 등을 하여야 함.

▶ 수방자재 현황관리가 2016년 11월 이후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창고 내 비치된 수방 자재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해 시 반출경로, 반출량, 불량 자재 폐기 등 자재현황을 상시 관리하여 하는에도 현재까지 관리대장을 정비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소홀히 함.

16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모니터링 관리 소홀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에 따르면 복지대상자 및 해당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9년~2020년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을 수립 및 모니터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 관리 해야 함.

- ▶ 모니터 상담 계획을 2019년에는 수립하지 않았으며, 2020년에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입력된 상담 실적 또한 계획 대비 상담 입력 실적을 미흡하게 입력하는 등 복지대상자 상담 모니터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지역주민에게 체감도 높은 복지행정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민간자원 연계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추천에 소홀히 함.

17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지침에 의하면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노인 등에 대하여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반기별 확인·점검이 필요하고, 점검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의 실제 급여수령 여부, 급여관리자 지정 동의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점검하여 급여지출 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 ▶ 급여관리 대상자로 8명을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나, 3명은 급여관리 지정 동의서누락 및 장기입원자 2명에 대하여는 급여지출에 따른 내역이 수급자가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체크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금을 지출하여 영수증 및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8 기초수급자 장애정도 진단비 및 검사비 신청안내 소홀

- 장애인복지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비 및 검사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장애등록 구비서류 안내시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지원’ 대상 여부를 충분히 상담하고 영수증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안내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시 병행신청하도록 하며, 장애인업무 담당자는 매월 행복e음에서 제공하는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미신청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 장애등록 진단비 및 발급비용을 신청 안내를 하지 않은 등 장애정도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9 보조지원 농기계 사후관리 소홀

- 지방재정법 제32조 9항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사용 가능 연한까지 매년 2회 이상 농기계 활용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 연 1회만 농기계 활용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
- ▶ 일부 농가는 농업분야 지원사업을 세대원과 농가주(세대주)가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례가 있어 추후 농업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원부상 농가주(세대주)가 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계도)할 필요가 있음.

20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살포 지도 소홀

-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는 농경지에 살포(공동 및 개별살포) 여부를 점검하고 미 살포 농가는 농작물이 식재되기 이전에 살포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 일부 지역에 토양개량제(규산질) 및 유기질비료가 방치되어 있는 등 살포 지도를 소홀히 함.

21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기본자료 작성 소홀

- 농산물 소형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은 평가 점수 산출 자료가 되는 관련자료(친환경 인증서 및 자부담 확보내용 확인용 본인 통장 사본)가 첨부되어야 하며,
-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 확인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본자료 작성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 확인 출장결과 보고서 미작성 등 작성관리를 소홀히 함.

22 소규모 다목적 텃밭 소득지원사업 관리·감독 소홀

- 「2019년 소규모 다목적 텃밭 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하여 설치한 소형 비닐하우스에 채소 등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사업 추진 주목적이어야 함.

- ▶ 작물 재배보다 건조장이나 버 육묘장 등 부가적인 용도 위주로 사용한 정황이 보이는 일부 농가가 있는 등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23 취학아동 명부 작성 및 관리 소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에 따르면 읍·면·동의 장이 취학아동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함.
-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 ▶ 취학아동 명부 작성시 열람기간, 열람대상, 열람장소 등을 안내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취학아동 명부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짜, 법적 근거,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게재하여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 소홀

-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에 의하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및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이륜자동차 번호판 반납 등 확인·검토를 하여야 하고, 이륜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여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를 처리하여야 함.

- ▶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시 등록면허세(15,000원)를 부과하지 않는 등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를 소홀히 함.